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위기… ‘박지원 게이트’로 응수

윤석열 캠프 “정권 차원의 음모”
홍준표 “개인 문제… 당 관련 없어”
유승민 “박지원 국정원장 수사하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야당 고발사주 의혹으로 대선을 약 6개월 앞둔 상황에서 위기에 봉착했다.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한 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 윤석열 전 총장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강조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도덕성도 타격 받기 때문이다. 이에 윤석열 캠프 측은 “정권 차원의 음모”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 전 총장의 고발사주 의혹은 지난 2일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김웅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여권 인사가 비판 보도를 한 언론인의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보도로 제기됐다.

캠프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제보자로 추정되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2일 서울 서대문구 UCC라운지에서 열린 '청년, 희망을 해킹하라' 청년 싱크탱크 상상23 토크콘서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친분을 들어 ‘박지원 게이트’라며 반박했다. 지난 10일 <TV조선>이 8월 초 조 전 부위원장과 박 원장이 서울 모처에서 만난 사실을 보도한 데 따른 주장이다.

장제원 캠프 종합상황실 총괄실장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윤 전 총장 의혹과 관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 씨에 대한

압수수색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사실관계 확인 ▲당일 출입했던 호텔 CCTV나 QR 신속 확보 등을 요구했다.

윤 전 총장도 지난 11일 대구를 찾아 언론 간담회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작년 1월이면 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저와 함께 일하는 수족이 다 잘려 나가고 조국·울산사건으로 보복인사를 받아가지고 나간 입장에서 무슨 고발사주냐. 도무지 선거 앞둔 검찰 정치공작이라 하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야당 고발사주’ 의혹이 확산되자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정치적 책임도 져야하는 점을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 홍준표 의원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개인 문제인 고발사주 사건을 당까지 몰고 들어 감으로써 당이 앞으로 큰 피해를 보게 생겼다. 그 문제는 윤석열, 손준성, 김웅의 개인 문제이지 우리 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은 같은 날 SNS에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에 규정된 국정원장이 이 사건에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으로 응당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공수처는 박지원 국정원장을 즉각 수사하라”고 말했다.

정치 평론가들의 입장이 엇갈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경선에서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서 생긴 의혹이기 때문에 장모와 부인의 사건과는 다른 부분을 건드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신윤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의혹이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받은 생태당·페라가모 의혹 같이 너무 복잡하고 국민에게 주는 상대적 박탈감의 정도도 낮다”고 분석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언론중재법·대북정책 등 놓고 ‘輿·野 격돌’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오늘 시작
정치 시작으로 외교·통일 등 분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3일부터 나흘간 일정으로 열리는 가운데 여야가 각종 현안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주된 쟁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사주 의혹’부터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현 정부 대북 정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이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내년 3월 치르는 대통령 선거 전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야당의 강도 높은 공세가 예상된다. 여당은 야당의 공세에 맞서 철저히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대정부질문은 13일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5일), 교육·사회·문화(16일) 등 각 분야별로 하루씩 진행된다. 질문은 총 1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

이 참여한다. 구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에 이어 정의당·국민의당·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는 각각 1명씩 참여한다.

먼저 여야는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근 논란인 윤석열 전 총장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강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고발사주 의혹은 윤 전 총장이 지난해 21대 총선 당시 측근을 통해 야당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여권 인사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돼 제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고 윤 전 총장 재임 당시 검찰권 남용이 있었는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해당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제보자로 추정되는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까지 폭로하면서 민주당이 강도 높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은 조성은 전

부위원장이 최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만난 사실을 근거로 ‘여당의 정치공작’, ‘야당 탄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혹 당사자인 윤 전 총장 캠프 측 장제원 총괄실장은 12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야당의 유력 주자를 제거하기 위해 대선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졌다. 이것은 국정농단이자 국기문란 행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최악의 사건”이라고 성명을 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도 대정부질문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재갈법’으로 규정된 뒤 “언론재갈법이 통과되면 최대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가짜뉴스라고 딱지 붙여서 퇴임 대통령에 대한 비판, 권력비리의혹 사건들을 철저히 감추자는 것”이라 비판한 바 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文, 北 무대응에도 대화 기조 이어간다

남은 임기 동안 대화 재개 시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차원에서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논의를 시작한다.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3~14일 일본 도쿄에서 한·일, 한·미,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와 만나 협의를 진행한다. 2박 3일 일정에서 노규덕 본부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3국 간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6월 21일 서울 회동 이후 3개월 만으로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한 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보건·방역·위생 등 대북 인도적 지원 방안이 이번 만남의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정황과 9·9절 정권수립 기념 열병식 등 최근 동향에 대한 분석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노 본부장은 12일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협의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생산적인 협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점 의제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위한 대북 인도적 협력 프로젝트를 한·미가 공동 추진하기 위해 상당한 협의의 진전이 있었다”며 “일본 정부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14일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만나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할 예정이다.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총무실에서 지난 10일 열린 '제68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축사를 영상물 통해 전하고 있다. /청와대

한 양국 간 노력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왕이 외교부장이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한 만큼 문 대통령과 만남도 예상된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중국에 북한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남북 공동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기념일인 17일 북한에 메시지를 날지 주목된다. 북한이 8월 한·미 연합훈련 당시 강하게 반발하며 통신연락선 응답도 하지 않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대화 재개’ 노력은 이어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문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2018년 9월 평양 능라도 경기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한반도를 선언했다”며 “9·19 남북합의는 반드시 이행돼야 한다. 역사에서 한번 뿌려진 씨앗은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 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올해 열리는 제76회 유엔총회에 직접 참석한 가운데 북한에 ‘대화 재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있다. 올해 남북 공동 동시 가입 30주년인 만큼 이번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대면 참석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청와대 측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최영훈 기자

원희룡, 분야별 공약 내세워 ‘승부수’

주택·복지 등 담은 국가 찬스 공약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도 지사(사진)가 연일 정책 발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이머전시(긴급) 플랜 1호 공약부터 주택·혁신성장·복지 등을 담은 국가 찬스 공약을 내놓으면서 정책 선거에 승부를 걸고 있다.

원 전 지사의 첫 공약은 ‘코로나 담대한 회복 프로젝트’로 대통령 취임 첫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총 50조원의 재정 투입 지원이 핵심이다. 이후 ‘국가 찬스’라는 부제로 주택,



취업, 안전 등 분야별 공약도 냈다. 먼저 원 전 지사는 ▲집값 절반을 정부가 공동투자 지원 ▲문재인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재건축 연한 폐지 ▲청년 주거안정 주춧돌 사업 ▲임기 내 전국 최대 250만 호 공급 등이 핵심인 주택 국가찬스 공약을 냈다.

이어 ▲공공 조달 졸업제를 통한 조달 시장 개혁 ▲100조원 규모 미래국부펀드 조성 후 5개 분야 미래 먹거리 산업 투자 ▲대기업의 고용 연계형 직무·직업 교육 훈련 의무화 등이 담긴 혁신

성장 국가찬스도 냈다.

원 전 지사는 이에 더해 복지 국가 찬스 공약으로 ▲자녀 출산 시 1년 간 매월 100만원을 지급하는 전국민 부모급여제도 도입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편도 공약했다.

특히 ‘성범죄 피해 공포제로’를 목표로 ‘여성안전 국가찬스’를 공약한 것이 눈에 띈다. 원 전 지사는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 선포 ▲성범죄 예방 법제도 정비 ▲신기술 활용에 일상에서의 불안 감소 등을 공약해 다른 대선 주자들보다 빠르게 해당 이슈를 선점했다.

원 전 지사는 또 자신의 유튜브 채널 원희룡 TV에서 ‘클라쓰가 다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찬스 공약의 세부 내용도 소개한다.

/박태홍 기자